

전략노트

Notes on Strategy

19호 | 2022-4

역사 기억과 역사 화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의 시사점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외교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역사 기억과 역사 화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천의 시사점

김태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1864년 이전 에도 시대 유산으로 한정하는 편법으로 제시한 사도광산 추천은 제국주의시대 일본의 어두운 20세기 역사를 제외하고 있다. 일본 근대사에서 한국인 약 2000명이 포함된 사도광산에서 일제 강제징용의 부정적 역사적 자취를 지우려는 일본 정부의 의도는 한일 외교관계에 있어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네스코는 2년 전에도 일본 정부가 군함도(하시마)를 세계문화유산에 추천했을 당시 강제징용 등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충실한 기술을 조건으로 일본 정부의 등재 추천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유네스코가 역사적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지난날 국가의 행동에 의해 자행된 폭력과 정의롭지 못한 제국주의적 국가 행동을 규명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역사교육을 국가 간 새로운 화해와 협력, 소통의 기반으로 삼기 위함이다. 그런데 군함도의 경우에도 그러하듯 유네스코의 이러한 승고한 의도가 현실영역에서 실천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이 함의하는 바를 국제정치적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 대립의 냉전구도가 무너지고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이후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과거사(공공의 역사 기억)는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재구성하는 핵심 기반이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추천한 사도광산은 이러한 국제정치적 의미를 갖고있는, 즉 한국과 일본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역사

적 현장이다. 각국의 국내 혹은 국제적 역사논쟁은 각각의 영역에서 분열되고 파편화된 사회 공동체를 복구하기 위해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미래와 건설적인 비전을 재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사논쟁을 부정적인 갈등으로만 보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건설적인 재사회화 과정으로 이해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

냉전의 종식 이후 정치적 변동성과 불확실성의 확대는 위안부, 강제징용 등 역사문제를 더욱 첨예한 대립양상으로 노정해 왔다. 역사 갈등과 재해석을 위한 부단한 노력은 현재의 분열된 공동체를 탈피하여 규범적 가치, 이익과 정체성을 새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시도이다. 1세기 전에 일본제국주의가 행한 폭력과 수탈 그리고 2차 대전 기간 여성의 성노예화, 강제징용 등으로 형성된 한국인들의 일본에 대한 호전적인 이미지는 지금도 일본의 군국주의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한일 관계는 이전 아베 정부에서 부터 이어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공격적 무기 수출금지 원칙 폐기 등에 이은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등으로 갈등과 변동성을 지속적으로 증폭시켜왔다. 이와 더불어 일본 제국주의 침략 역사가 불러온 적대감과 갈등, 경쟁 심리, 불확실성의 증대는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안정을 위한 새로운 공공의 지식 기반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의 지식 (public knowledge)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공유된 기억이다.

한일 양국이 정체성과 이익, 의도에 대한 상호 불신과 불확실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폭력적인 도구가 역사에 대한 공유

할 수 있는 지식, 즉 공공기억의 재구성이다. 민주국가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는 정치학적 상식에도 불구하고 독도 주변에서 한일 무력충돌 가능성은 현재도 암묵적으로 진행형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나름 민주국가로 인정받는 국가이지만 기이하게도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한일 관계를 평화롭고 안정된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데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왔다.

국제사회는 노예제를 경험한 미국, 참여한 인종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종청소를 경험한 르완다 등에서 역사에 대한 진실과 이의 공유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규명과 성찰)를 회복적 정의와 화해, 그리고 협력을 위한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로 인식하고 제도화해 왔다. 다시 말해서 역사를 둘러싼 진실 논쟁과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역사적 지식의 축적은 국제사회에 중요한 안정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불확실한 국제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역사적 경험을 공통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공유된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도광산은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 될 수 없는가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20세기 군국주의 유산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한일 양국이 참여하게 대립해 왔던 역사 문제를 회피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과거 역사 중 특정한 시기만을 보려고 하는 것은 특정한 그룹이 의도하는 이미지의 과거를 닮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폐쇄된 과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과거의 군국주의화 과정에서 일본 시민들이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던 민주적 견제 역할을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왜곡된 과정의 초입이다. 상대방이 포함되어있는 전체로서 공유할 수 있는 역사는 잊혀진 기억을 사유화하지 않고 상대방과 자신을 동등한 선상에서 평가하고 포함하는 상호 정당성의 규범적

기준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시대의 일부를 선택적 기억하도록 유도하려는 행동은 역사기억이 공공지식으로 전환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도광산의 역사는 지금을 살아가는 국제사회에 무엇이 국가가 할 수 있는 행동이며 무엇이 국가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인지를 인식시켜주는 중요한 교육 현장이다. 일본이 기억하고 싶어하는 근대화의 자랑스러운 유산뿐만 아니라 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과거의 주체 역시 또 하나의 일본이었다. 강제노역으로 억압받은 타자, 즉 한국인과 다른 아시아인들 역시 자랑스러워 보이는 사도광산의 암울한 또 하나의 측면이다. 이러한 양면성을 가진 역사의 현장 모두가 전체로서 공공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정체성과 이익을 공통으로 만들어 가는 길, 즉 각각의 주장과 의도의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심도있는 진실 추구, 즉 역사적 사실 논쟁을 통해 국제사회의 구성원들로 부터 그 정통성을 인정받는 과정이 바로 국제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지식, 즉 규범(norm)의 형성 과정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 갈등, 냉전의 종식, 북한 핵문제,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지는 공급망과 경제적 경쟁구도 등은 지역적 불확실성을 심화시켜왔다. 또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와 지역적 리더십의 상대적인 하락 그리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치 군사적 성장 등은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새롭게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사도광산은 진실논쟁, 즉 사도광산의 역사적 구성원들을 온전히 포함하고 그곳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정당하지 못한) 일들을 했는지를 통해 국제사회가 공유해야 할 미래규범과 가치, 비전을 새롭게 부여하는 역사적, 국제적인 화해와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것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의 진정한 뜻이 있다.